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72호 (2015-04) 발행일 : 2015. 01. 26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노후소득의 중장기 전망과 적정성\*

본 연구는 초저출산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평생소득 가설을 바탕으로 65세까지 축적된 공적연금 및 자산이 은퇴 후 최소·최적소비를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 함

분석 결과를 보면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은 성숙에 따라 평균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의 충분성을 만족시키지만 생애소비수준의 충분성은 최대 45%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며,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여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할 경우 평균적으로 생애소비수준과 최저생계비기준의 충분성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100% 전환율을 적용하더라도 38.0%가 생애소비수준이하의 가구이며, 0.2%가 최저생계비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김재호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1. 서론

-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2007년 15.1%에서 2010년 12.8%로 2.3%p 감소했지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7.2%로 2.6%p 증가했으며, 이는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이와 같이 높은 노인빈곤율은 예상치 못한 빠른 기대수명 증가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및 사적연금 시장의 비활성화, 비자발적 은퇴 증가 등의 사회변화에서 기인함
- 최근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령자들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머물게 하는 '황혼의 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미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은 2000년 29.6%(29.4%), 2005년 30.0%(29.8%), 그리고 2013년 31.4%(30.9%)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본 원고는 김재호(2014)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에서 일부 발췌하여 수정 보완함.

- 이와 같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생애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2013년 현재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급여는, 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 월급여를 100.0으로 했을 때, 80.7 수준으로 55세~59세의 105.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고령자들의 노후소득원으로 부족한 상황임

■ 많은 노인들의 경우 정기적 소득은 부족하지만 생애근로를 통해 축적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역모기지 방식으로 실물자산을 현금화하여 정기적인 소득으로의 전환이 가능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sup>1)</sup>, 일반노년층의 40.6%는 현재의 월수입금액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의 월평균 수입금액은 120만원으로 희망 월 수입금액은 188만원으로 68만원의 격차가 발생

○이 때 주택연금의 평균 월지급금액은 약 98만원으로 노인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부족한 수입을 보충할 수 있음

## 2.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

### 가. 인구구조변화

■ UN의 연령대별 인구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에 545만명(11.0%)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60년에 2,187만명(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에는 2,187만명(49.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인구를 연령계층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자)의 진입 시기에 따라 급격히 성장함을 알 수 있음

-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따라 전체노인 중에서 65~74세 노인의 비중은 2020년 57.6%(465만명)에서 2030년 60.6%(664만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며,

- 75~84세 노인의 비중은 2030년 29.6%(376만명)에서 2040년 38.5%(636만명)로 증가하고 8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중은 2040년에 12.6%(208만명)에서 2060년 25.4%(448만명)로 크게 증가할 전망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의 유입이 감소하여 젊은 연령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함

- 생산가능인구 중 15~24세는 2010년 667만명(18.6%)에서 2020년 568만명(15.5%), 2060년 320만명(14.6%)으로 감소하고,

1)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84세의 일반노년층 3,000가구와 주택연금을 이용중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출처: 주택연금 소식지 2014(가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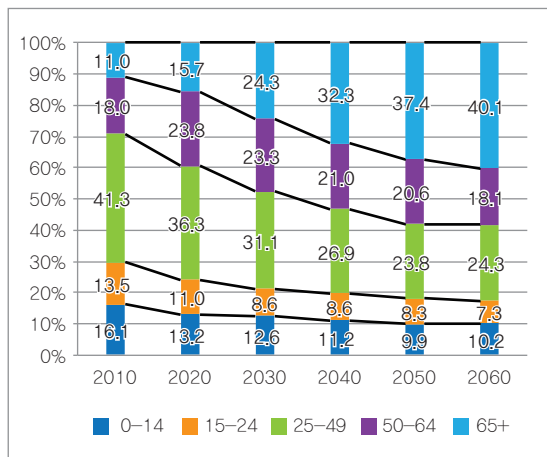
-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는 2010년 2,043만명(56.8%)으로 큰 구성비를 이루고 있지만 2050년 1,106만명(45.2%)까지 감소후 2060년 1,070만명(48.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 생산가능인구중 높은 연령층에 해당하는 50-64세는 2010년 24.7%수준에서 2030년 37%, 2060년 36.4%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는 2010년 15.2명에서 2060년에는 80.6명으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연령대는 주로 25~49세로 이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 26.7명에서 2060년 164.7으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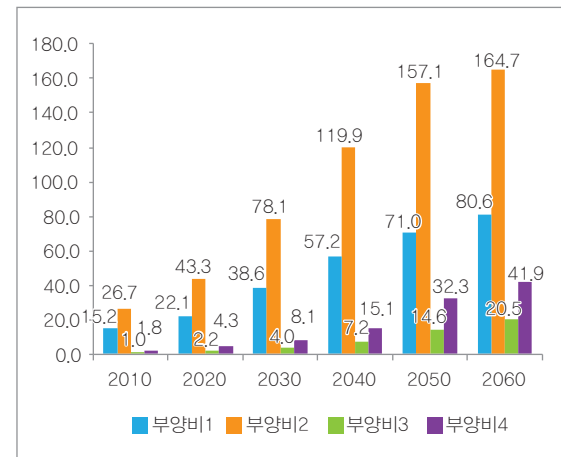
○특히, 의료비지출이 높고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8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부양비는 2010년에는 1.0명을 부양하지만 2040년에는 7.2명, 2060년에는 20.5명으로 크게 증가함

○25~49세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5~49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010년 1.8명에서 2030년 8.1으로 완만히 증가하다 2040년에 15.1명으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2060년 41.9명으로 증가해 노인부양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추이 (단위: %)



[그림 2] 노인부양비<sup>2)</sup> (단위: %)



### 나. 노후소득 현황

■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선진국의 고령자들과 달리 매우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자간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가 OECD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

○2013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1%로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06년 42.8%에서 2013년까지 5.3%p가 증가했으며, 높은 빈곤율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3년 29.9%로 2006년 25.8%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소득불평등도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고령자 지니계수는 0.420으로 전체 0.30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의 0.390보다 0.03%p 증가함

2) 부양비1=(65세이상 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100, 부양비2=(65세이상 노인인구/25세-49세 생산가능인구)×100, 부양비3=(85세이상 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100, 부양비4=(85세이상 노인인구/25세-49세 생산가능인구)×100

〈표 1〉 노인의 경제상태

(단위: %, 명)

구분	상대 빈곤율 <sup>1)</sup>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니계수		
	전체	18~65세	노인인구	총수급자	65세이상 수급자	구성비 <sup>2)</sup>	전체	18~65세	65세이상
2006	14.3	11.1	42.8	1,449,832	373,595	25.8	0.306	0.295	0.390
2007	14.8	11.1	43.6	1,463,140	386,157	26.4	0.312	0.299	0.397
2008	15.2	11.5	44.1	1,444,010	382,050	26.5	0.314	0.300	0.403
2009	15.3	11.5	45.9	1,482,719	387,847	26.2	0.314	0.300	0.404
2010	14.9	11.3	46.3	1,458,198	391,214	26.8	0.310	0.297	0.411
2011	15.2	10.8	47.6	1,379,865	378,411	27.4	0.311	0.294	0.420
2012	14.6	10.0	47.2	1,300,499	376,098	28.9	0.307	0.287	0.433
2013	14.6	9.6	48.1	1,258,582	376,112	29.9	0.302	0.280	0.420

주: 1) 전국가구(1인 및 농가포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2) (65세 이상 수급자/총수급자)×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각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2020~2050년 공적연금의 성숙이 노후소득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역모기지 방식으로 유동화하여 정기적인 소득으로의 전환할 경우 필요한 노후소득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분석

### 3. 중장기 노후소득 전망

#### 가. 기본가정

- 본 연구는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진행되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평생소득가설을 바탕으로 65세 까지 축적된 공적연금 및 자산이 은퇴 후 최소·최적소비를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sup>3)</sup>

○노후소득의 범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가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함

-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비율이 낮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매우 낮은 것을 근거로 함
- 분석의 대상은 2020년부터 65세 이상이 되는 코호트를 기준으로 공적연금수급이 가능하고 가구순자산이 존재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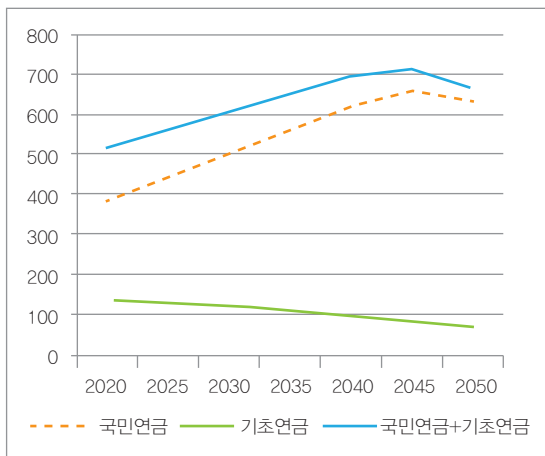
3) 생애소득합수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15차 개인 자료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은퇴시기까지의 생애소득경로 등을 추정하는데 적합한 자료임. 또한 개인의 임금, 비임금소득에 대한 자료 및 가구소득, 소비, 자산 등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개인 자료 중 2012년 기준 27~59세 개인자료 및 이들의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은퇴 후 공적연금자산 및 필요소득수준을 추정함.

4)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2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을 납부했다면 감액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0년 미만 일시금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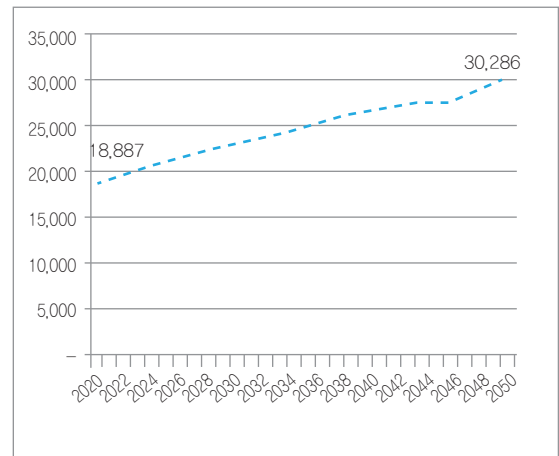
나. 공적연금의 추정

- 각 개인의 생애연금자산을 계산한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금자산을 합산하여 가구의 연금자산규모를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20년 38.9만원에서 2045년 65.3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이후 2050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급여증가효과가 발생하지만, 소득대체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가입증가효과를 상쇄
  - 또한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구내 연금 수급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 역시 낮아지기 때문임
- 기초연금 급여의 현재가치는 2020년 14.3만원에서 2050년에 7.2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함
  -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작아짐
  - 둘째, 기초연금 급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가하므로, 명목임금상승률을 이용하여 현재가치화할 경우 현재가치가 점점 작아지게 됨

[그림 3] 노인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소득 (단위: 천원)



[그림 4] 추정된 자산의 추이 (단위: 만원)



다. 자산소득환산액 추정

- 2020년부터 205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순자산을 추정하여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한 결과, 2020년에 1억8,887만원이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3억28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추정된 자산과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남은 생존기간 동안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소득은 2020년 1,576만원이며, 이를 소득전환율<sup>5)</sup>을 적용하여 월소득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음

5) 자산의 유산통기, 거래비용에 따른 자산보유 욕구를 반영하여 순자산의 전환율(25%, 50%, 75%, 100%)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전환함.

- 25%의 소득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소득으로 전환하면 2020년 32.8만원에서 2050년 59.3만원으로 증가, 50%를 적용하면 2020년 65.7만원에서 2050년 118.5만원, 75%를 적용하면 2020년에 98.5만원에서 2050년에 177.8만원, 그리고 100%를 적용하면 131.4만원에서 2050년 237.1만원으로 증가함

## 4. 중장기 노후소득의 충분성

### 가. 적정 및 최소 기준

- 가계소비함수 추정결과를 토대로 은퇴 후 각 연도의 소비수준을 추정한 후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하여 합산한 결과,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 평균은 약 4억 322만원으로 추정됨

○본 연구에서 추정된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은퇴 후 생존기간을 고려한 월평균액수로 전환하면 약 153만원으로 가계동향조사상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수보다는 많은 수준

-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이 가구주 연령 27~59세 가구로 가계동향조사의 노인가구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다는 점, 그리고 현재 추정된 필요소득수준이 생애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된 소득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추정치는 현실을 상당히 잘 반영하는 추정치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생계비 기준의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은 1억 9,943만원, 월평균 필요소득은 약 69만원으로 추정됨

### 나. 노후소득의 충분성

- 생애소비를 유지하는 공적연금 총족률은 2020~2045년 기간에 25%수준에서 45% 수준으로 높아진 후,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공적연금총족률은 2020~2045년 기간에 60% 초반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증가한 후,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65세 가구주의 생애소비수준을 기준으로 자산소득환산액을 고려한 총노후소득<sup>6)</sup>의 충분성을 살펴보면, 소득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생애소비수준의 49.8%~76.3%를 충당할 수 있으며 2050년에는 88.7%~166.7%의 총족성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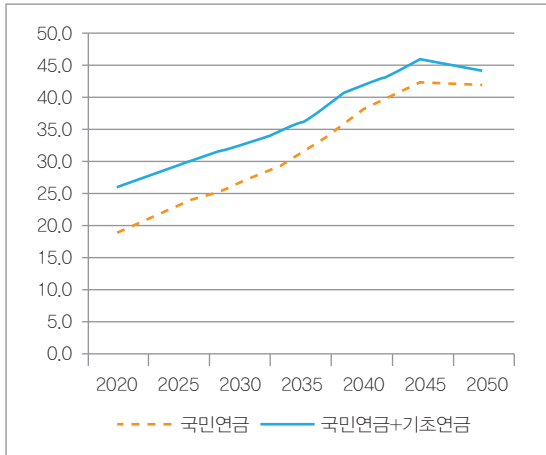
○하지만 생애효용에 미달하는 가구비율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96.4%~80.2%에서 2050년 68.0%~33.1%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율의 가구가 생애효용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자산총족률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93.5%~147.6%에서 2050년 168.5%~317.3%로 총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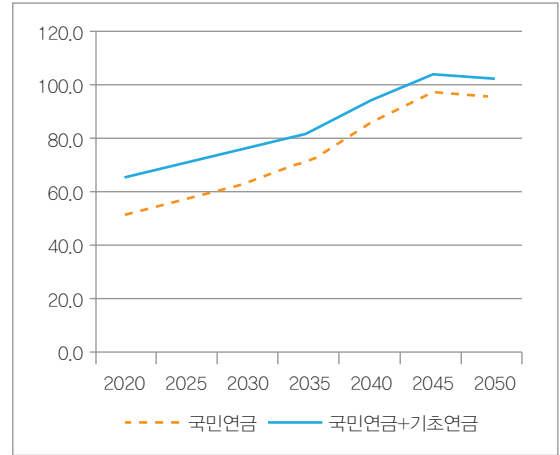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60.8%~17.1%에서 2050년 10.0%~0.2%로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 총노후소득=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순자산의 소득환산액

[그림 5]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단위: %)



[그림 6] 최저생계비 기준 공적연금의 자산충분  
(단위: %)



[그림 7] 생애효용 기준 총노후소득의 충분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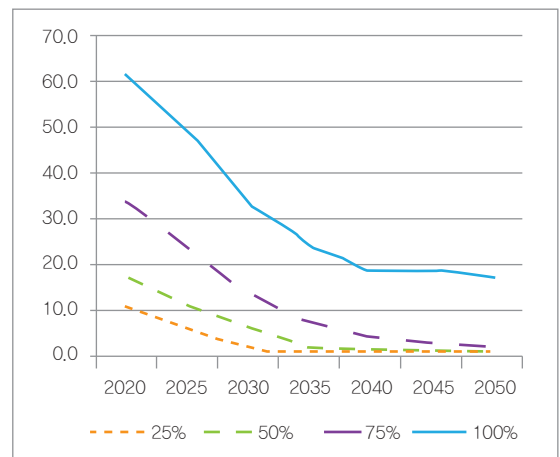
[그림 8] 총노후소득이 생애효용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단위: %)



[그림 9] 최저생계비 기준 총노후소득의 충분성  
(단위: %)



[그림 10] 총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단위: %)



## 5. 결론 및 시사점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다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두루누리사업을 통한 소규모사업장의 국민연금가입 촉진과 함께 주부들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각지대에 속해 연금수급이 되지 않는 은퇴가구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함
  - 둘째, 국민연금 급여수급 직전까지 근로활동과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고령자의 근로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노동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셋째, 부족한 노후소득을 주택연금가입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20~2050년까지 현재 근로자들이 65세까지 근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실제 가입기간보다 과다하게 가정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반영하지 않은 공적연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산의 소득환산에 사용된 기대여명의 한계로 5년마다 65세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원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의 연령별 인구구성의 한계로 추정이 후반기로 갈수록 관측치의 수가 낮아 신뢰도가 다소 낮아지는 한계가 있음

집필자 | 김재호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문의 | 044-287-8362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 TEL 044)287-8000 | FAX 044)287-8052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